

긴급토론회

---

#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

---

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람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프로그램

|      |                       |
|------|-----------------------|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패널 1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 패널 2 |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 패널 3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 패널 4 | 리나 코레이라트 호주 국립대학 박사과정 |
| 패널 5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 대화와 협상으로 위기 극복,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sup>1)</sup>

---

김창수 / 코리아연구원 원장

8월 25일 밤 2시, 남북합의를 발표하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자세가 북한과 회담에서 남한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식의 말도 나돌았다. 반면에 이번 회담에 참석한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조선중앙TV에서 남한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이라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남북합의, 긴장완화인가? 국내정치용인가?

이번 모든 회담이 그렇듯이 이번 회담 합의도 쌍방이 입방이 반영된 윈윈(win-win) 회담의 성격이었다. 쟁점이 되었던 사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2항이다.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주어는 ‘북측’이다. 그리고 주어인 ‘북측’이 꾸미는 것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즉 부상을 시킨 주어가 ‘북측’이 아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북측이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지뢰도발로 남측 군인들의 부상을 입힌 주체가 ‘북

---

1) 이 글은 8월 2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231>

측'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내의 보수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사과도 아니고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다는 여론도 있다. 또 북한이 14.5mm 고사총과 76.2mm 직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반면에 '북측'이라는 주체를 사용함으로써 주어가 없는 유체이탈 화법을 피했다는 것은 남한이 거둔 성과임이 분명하다.

남북 합의에 대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관진 실장의 발표보다 3분 먼저 발표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은 북한 당국이 남한과 회담을 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TV에 출연해서 '근거 없는 사건'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남북 합의를 이끌고 난 후 남과 북은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의문을 해석하고 있다. 이때 합의문 해석은 모두 두 양측의 국민들을 향한 것이다. 모든 협상이 합의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문 자체의 성격과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문은 분명 어느 일방이 유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이해를 조절한 최대 공약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남한 정부는 유감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북한은 유감표명과 확성기방송 중단을 교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win-win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지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북한은 지난 8월 4일 지뢰도발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함지뢰 폭발과 관련한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남쪽 야산에 떨어진 14.5mm 고사총탄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떨어진 76.2mm 직사포탄의 궤적 추적을 못했고, 낙탄지점과 탄피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황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도발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 추진철책 통문에서 터진 목함지뢰는 북한제이다. 지형상 폭우에 유실된 목함

지뢰가 남측 철책 아래에 매설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14.5mm 고사총 한발과 그 직후 발사된 76.2mm 직사포 3발은 북한이 ‘근거없는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이 한 의도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상황의 흐름은 이러하다.

목함지뢰 사건(8.4)→ 확성기 방송 재개(8.10) → 북한 14.5mm 고사총 발사(8.20) → 북한 76.2 mm 직사포 발사(8.20) → 북한 김양건 대화제기(8.20) → 북한 48시간 이내 확성기 중단 요구(8.20) → 남한 155mm 자주포 29발 발사(8.20) →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8.20) → 박근혜 대통령 3군단 방문(8.21) → 북한 김양건 회담제의(8.21) → 한국 회담 역제의 및 수용(8.22) → 2+2 회담 시작(8.22) → 합의(8.25)

이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은 8월 20일 두 차례의 포격 이후 남한의 대응사격을 하기도 이전에 이미 김양건 대남비서의 대화제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의 대응이 없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48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하고 남한을 압박했다. 만약 두 차례의 포격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한이 대응사격을 하기도 전에 김양건 비서의 제안을 통해서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시했던 상황이 뒤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8월 20일 두 차례의 포격으로 노리고자 하는 것은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다.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주체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원칙이 북한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몸 바쳐 사수해야 한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 자체가 가지는 황색바람의 확산보다는 최고 존엄에 모독에 목숨을 걸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남한의 맞대응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해 북한이 선택한 것이 고사총 1발과 직사포 3발의 발사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포격 도발 이후 곧바로 김양건의 대화제기가 뒤따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의 모적이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확전을

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사총은 연속발사를 할 수 있는 기관총인데 딱 한발을 남측 지역 야산에 발사하였다. 고사총의 발사로 남한 군대를 긴장시킨 후에 3발의 직사포를 쏘았다. 직사포는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떨어졌다. 남한의 시설이나 인명피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초저강도 도발하면서 대화제안을 병행한 것은 긴장고조를 통제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북한의 긴장고조 전술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이 포격도발을 한 8월 20일 밤에 유엔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유엔사는 연평도 포격 때는 대응을 묻는 한국 군부에 대해 이렇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작전통제권에 따른 교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군대의 자위권에 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DMZ 관리는 유엔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엔사는 신속히 북한과 대화를 제의했다.

미국은 현 긴장상태를 방치하면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 유엔제재가 들어가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오바마 정부 임기말에 북한과 골치 아픈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반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9월 3일 전승절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해소를 강하게 주문할 것이다. 이 같은 국제정세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이 같은 국제정세가 자신들의 긴장 고조 후 상황관리라는 화전양면전술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군사적 모험주의이다. 군사적 위협과 긴장조성이 상시화될 수 있는 새로운 남북대결구조가 마련되었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여 남북한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은 한반도의 위기발생 가능성이 매우 손쉬워졌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 평화의 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과 준전시상태 선포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의도파악 보다는 ‘이에는 이, 눈에 눈’이라는 자세로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남한의 대응이다. 합의에

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더 불안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합의 이후 합의문을 편리하게 해석하면서 쌍방의 국민을 상대로 명분 쌓기에 급급해 하는 남북당국의 태도도 불안정의 한 이유가 된다. 남북 양쪽 여론을 호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담긴 대화와 협상의 정신을 바탕으로 당국과 민간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대화와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 전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

## 전쟁선동을 이겨낸 남북 2+2 회담

---

김창수 / 코리아연구원 원장

무박 4일의 협상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하기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을 녹여버렸다. 남북한이 2+2 회담이라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했다. 군사적 충돌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남한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 최고경계태세를 내렸다. 북한의 잠수함 50여척이 기지를 떠났는데 우리는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킬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 군사긴장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

국내에서는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불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종편에 출연한 퇴역한 육군 4성장군은 7일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그 파멸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우습게 아는 허풍과 만용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물정 모르는 낭만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이번에 2+2 회담을 열어서 남북한의 군사 위기를 해소한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군사위기를 해결한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었다. 물론 2+2 회담이 열리는 배경은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강압외교를 구사했다. 힘을 사용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 억지(deterrence)



라면, 힘을 사용해서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것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이다. 북한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도 일종의 강압외교이다. 한국전쟁 휴전협상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긴장고조와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 합의는 되었지만 불안은 남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른바 ‘말폭탄’을 퍼부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말폭탄에 담았다. 하지만 말에 그쳤다. 말에 의한 공갈포(empty threat)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위협이 된다. 하지만 2013년에 북한이 구사한 북한의 공갈포는 빈 말에 그쳤다. 북한은 위협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대포를 발사하였던 것이다. 남북한의 완충기능이 없어지고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가 한반도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2+2 회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말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사용될 정도로 한반도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와 협상으로 불안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은 상시화될 수 있는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다.

이번 2+2 회담에서 합의한 6개항에는 남북 긴장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하여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담겨 있다.

2,3,4항이 8월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1항과 6항은 남북 당국간 회담과 민간교류 항목이다. 5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다. 합의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한 조건에서 남북대화의 플랫폼으로 당국간 회담과 민간교류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 플랫폼에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가동시키겠다는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 협상의 예술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체를 명시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합의문에는 ‘사과’대신 ‘유감’으로 표시되어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유감표명의 주체로서 ‘북측’을 명시하였다. 흔히 세 간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것을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수언론에서도 이번 합의에 주어가 생략된 유체이탈화법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주체를 명시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이다. 보도문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여 유체이탈화법에서 벗어나고, 또 ‘유감 표명’이라고 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윈윈(Win-Win) 협상이다. 협상에서 100대 0의 승리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승리가 아니다. 협상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win-win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력 때문이다.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3항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으로 합의하였다. 3항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해석하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유효한 시간범위는 8월 25일 이전일 수 있다. 문장이 비문이라서 차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 재현될 소지가 있는 장관급 회담 ‘격’ 논쟁

남북은 ‘당국간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여러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첫문장에 내세웠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속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일게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당국간 회담이란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내각책임참사 장관급 회담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 남북장관급 회담은 회담에 참석하는 장관급의 격 때문에 결렬되었다. 당시 북한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 회담에 내보내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남담당 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부

장을 지목했다. 북한은 통전부장은 부총리급이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남북관계의 첫단추는 잘못 꿰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2+2 회담의 한축은 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전부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었다. 북한이 이번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홍용표장관을 지목하였다. 하지만 김양건 비서와 홍용표 장관이 남북장관급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마주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김양건은 북한의 장관급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급 회담이 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장관급회담이 아니면 차관급 회담부터 시작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협상의 예술을 발휘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국간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이 열리게 될지도 주목된다. 당국간 여러분야의 대화와 협상이란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명시한 바 있다. 남북 총리회담, 경제부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사회문화장관회담, 국회 회담 등이다.

6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점 역시 눈에 띈다. 민간은 당국과 달리 범위가 매우 넓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은 기존에 합의했던 남북간의 민간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 지정학을 넘어야

이번 합의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대화의 물꼬가 트 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9월의 일정을 살펴본다면 난관도 존재한다. 중국은 전승절 행사에서 미국의 MD 와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탄두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열병식에서 등장 시킬 것이다. 변수는 북한이다.

지난 5월 9일 러시아이 전승 70주년 행사에 맞춰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러시아가 전승절 열병식에서 ‘RS-24 야르’라는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킨 것에 대한 북한의 MD 반 대공조로 풀이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절에 참가한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 전승절에 맞춰서 군사행동을 하면 동아시아 정세는 예측불허의 복잡한 상황에 휩쓸릴 수 있다. 게다가 9월 중순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이 열리고,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동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있다. 이번 남북의 2+2 합의가 복잡하게 전개될 소지가 있는 동아시아 정세를 앞두고 남북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상수가 되어서 예상되는 복잡한 변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번 남북의 합의를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더욱 견고히 발전시킬 때이다. 

## 평화주의적 남북관계를 기대한다<sup>2)</sup>

---

서보혁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8.25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무박 4일에 걸친 협상 직전에는 상호 비방과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상황이 빚어졌다. 회담 결과를 놓고 충돌에서 대화로 반전을 이루었다는 평가에 남북관계 개선에 거는 기대가 더해진다. 반면 북한의 사과가 불충분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타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광복 70주년 8월을 보내며 광복의 기쁨을 되새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 졸이며 깨달았다. 나의 안전과 거래의 생존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고 가꾸어야 할 꽃과 같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남북한 정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평화는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평화롭게 살아갈 인권의 하나(평화권)이기도 하다. 이번 남북간 충돌 사태를 연출한 두 정권은 거래의 평화권을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점에서 내외에 유감 표명을 할 법하다. 이번에 벌어진 충돌과 대화의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8.25회담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론적 역사의식이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8.25 합의는 전쟁 위기로 치닫던 긴장상태를 대화 분위기로 전환시킨 점에 일차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도발과 비방을 삼가고 남북관계를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과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것은 성과이다. 이는 25년 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연상시킨다.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

2) 8월27일자 국민일보 기고글입니다.

에 관한 합의서대로 이행해 나가면 남북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은 보장된다. 물론 8.25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의 사항과 합의 이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과 국내정치적 이용은 삼가야 한다. 8.25 합의 이행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남북은 당국 간 대화의 정례화와 군사 핫라인의 재가동을 이루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나가야 한다. 국내정치에서도 소통이 강조되지만 남북관계 만큼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곳도 없을 것이다. 불신과 오해, 일방적 판단의 뿌리는 대화가 없는 가운데 무성해지는 편견 탓이다. 또 정전체제가 작동하고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의미는 막중하다.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함께 다가올 첫 ‘당국회담’의 해결 과제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활발한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증진되어야 한다. 사실 현 정부는 야당을 비롯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미흡함이 없지 않았다. 금번 합의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북 민간교류는 상호 신뢰조성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국민적 여론 조성에도 기여한다. 다양한 시각과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해 정부 정책의 지지폭을 넓히고 협상력 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보다 과감한 자세로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오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주변 4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외교를 전개해 통일의 대외적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확장시키고 민족의 미래에 대비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통일외교는 남북협력과 선순환 관계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8.25 합의는 평화주의적 남북관계의 출발로 삼을만하다.



긴급토론회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합의'와 제안

발행일 2015. 08. 27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경주 교수)

담당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mailto: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